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 논쟁

왜 “사회주의” 구절 삭제를 반대하는가

2011
다함께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 논쟁 왜 “사회주의” 구절 삭제를 반대하는가

펴낸곳 다함께

초판 발행일 2011년 6월 12일

주 소 110-612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243

전 화 02-2271-2395

팩 스 02-2271-2396

alltogether@alltogether.or.kr

http://www.alltogether.or.kr

값 2,500원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차례

소책자를 발간하며 ... 5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 비판 ... 7

1. 강령 개정의 정치적 배경 ... 7

2. 사회주의 강령 삭제 논거들 반박 ... 15

● 사회주의는 한국 사회 변혁의 목표가 될 수 없는가? ... 15

● 노동자 정당이 아니라 “국민정당”이 왜야 한다? ... 23

● 진보대통합을 위해 사회주의 강령을 삭제해야 한다? ... 33

● 사회주의 강령이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 36

● ‘운동권’ 정당에서 정책 정당으로? ... 40

● 사회주의 강령이 국가보안법 탄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 46

● 당원들이 사회주의 강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 49

3.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 54

진보대통합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 ... 64

이 소책자를 발간하며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지만,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진보정치가 단결해 자본가 정치의 헤게모니에 도전하자는 진보적 대중의 염원, 특히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강력한 통합 압력이 최종 합의문 작성을 강제했지만, 통합을 둘러싼 쟁점이 갈수록 달궈지는 형국이다.

다른 한편, 민주노동당은 진보대통합을 앞두고 강령을 개정하려 한다. 강령 개정의 핵심은 ‘사회주의’ 구절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얹히는 것이다.

두 사안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주노동당의 강령 개정 시도(노동자 운동의 이데올로기를 후퇴시키기)는 새롭게 건설될 통합 진보정당의 이데올로기를 매우 온건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소책자는 이 두 사안을 다루고 있다.

I부는 민주노동당의 강령 개정 시도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이 글들은 여러 필자들이 민주노동당의 강령 개정 근거들을 각각 분담해 분석·비판한 것이다. 강령 개정의 근거들이 각각 다른 근거들과 얼마간 겹쳐 있다 보니 이에 대한 비판도 다소 내용상 중복돼 있다. 이러한 중복을 없애는 것은 각각의 글들이 갖고 있는 논리적 구조들을 허물 수 있어 그대로 뒀다. 또, 이것들이 독자들에게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편협하고 조잡한 근거들을 대며 민주노동당의 강령적 후퇴를 정당화하는 목소리들이 강한 이때 사회주의의 기본 원칙을 반복해 피력하는 것이 얼마간 필요하기 때문이다.

II부는 진보대통합의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2011년 6월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 비판

1. 강령 개정의 정치적 배경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강령 개정의 근거로 내세우는 명분과 핑계 들(이 소책자의 '사회주의 강령 삭제 논거들 반박'에서 이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과는 달리, 강령을 개정하려는 진정한 이유와 배경은 첫째, 선거주의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일찍부터 사회주의 강령을 탐탁치 않게 여겨 왔다. 여기에는 사회주의 정당으로 여겨질 경우 선거에서 표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차베스가 사회주의라는 최대 강령을 갖고 시작했다면 선거를 통해 집권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민주노동당 2009년 제2차 중앙위원회 자료집)

따라서 당의 급진성을 희석시켜 선거에서 표를 더 얻어야 한

다는 생각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운운하는 “운동권 정당”에서 벗어나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노동자들뿐 아니라 중소 상공인들 속에서도 당원을 늘려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강령이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강령 개정의 두 번째 정치적 배경은 자주파가 민주노동당 지도권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 것과 관계있다. 객관적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민주노동당 내 세력 관계의 변화가 강령 개정 시도의 배경 중 하나인 것이다. 즉, 2008년 분당 이후 민주노동당이 “정파연합당”에서 사실상 “자주파들의 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자주파의 그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자주파 지도부는 과거에 평등파와 자주파가 합의했던 ‘사회주의 강령’을 자주파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으로 대체하려 한다. 자주파 경향 지도부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당내 좌파들의 반대를 무시하며 패권적으로 자신들의 일방적 의견을 관철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강령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 계승”뿐 아니라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 극복” 부분까지 삭제하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분당 당시에 평등파가 “중북주의” 같은 마녀사냥식 용어를 쓰고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당한 당원들을 제명하려 한 것은 분명

문제였지만, 일부 자주파 지도자들이 북한 핵실험 등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한 것도 문제였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운영상 전 정책위 부위원장장은 “패권주의 극복의 모습과는 거리가 한참 먼 행동”이라고 했다. 진보신당 이재영 정책위의장도 이번 강령 개정이 “구 민노당 시절 이른바 NL계열에서 당 초기부터 소수안으로 주장해온 내용을 강령 차원에서 완결적으로 반영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강령 개정은 민주노동당 자주파 지도부가 자신들의 의견을 패권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진보대통합에서도 양보와 협력보다는 패권적 주도성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나아가 분당 이후에도 아직 당 내에 남아 있던 사회주의자들과 반자본주의자들을 (정치적으로) 당 밖으로 밀어내려는 의도까지도 깔려 있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강령 개정의 핵심적 정치 배경은 민주노동당 자주파 지도부의 계급협력 추진 의도에 있다.

자주파 지도부는 현 시기를 민주주의 변혁 단계라고 본다. 사회주의는 먼 미래의 일일 뿐이지 변혁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이것이 실천에서 뜻하는 바는 민주대연합 전략, 곧 이명박 정권에 반대해 노동자 정당과 자본가 정당(민주당)이 연합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이런 연합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강령이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자주파는 이미 2003년에도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 구절을 삭제하려 한 바 있다. 2009년 정책당대회를 앞두고도 강령 개정 시도가 있었다.

나아가,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이미 2009년 말부터 민주대연합 전략을 실행에 옮겨 왔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비롯해 각종 선거에서 이뤄진 ‘야권연대’가 그것이다. 그리고 야권연대는 단지 선거에 그치지 않았다. KEC 점거 파업과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 파업 때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함께 중재단을 꾸려서 노동자들에게 점거를 풀라고 설득하는 구실을 했다. 이것은 노동자 투쟁의 발목을 잡는 효과를 낳았다.

결국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강령 개정 기도는 이런 당의 지향과 실천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사후 조치인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합의문 원안에 있던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함으로써”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데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이처럼 강령 개정을 정당화하는 다양한 명분들은 모두 핑계에 불과하고,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선거주의와 계급협력 전략을 패권적으로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강령 개정 시도의 진정한 정치적 배경이다.

진보신당은 어떤 입장인가

현 진보신당 지도부나 진보신당 독자파의 리더 중 다수가 민주노동당 강령에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 계승”을 포함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또 2003년에는 그 사회주의 강령 삭제 시도에 반대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현재 진보신당 지도부에서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사회주의 강령 삭제 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별로 없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합의문 원안에 있던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함으로써”라는 문구 삭제에 동의할 때 진보신당 지도부도 함께 동의했다.

이미 분당 때부터 이런 후퇴는 시작돼 왔다. 당시 평등파 리더들은 민주노동당이 ‘친북당’, ‘민주노총당’, ‘데모당’이라는 보수적 편견에 타협하는 주장들을 하며 당을 우경적으로 혁신하려고 시도했다. 분당은 평등파의 이런 시도가 실패한 결과였다.

분당 이후 새로 만들어진 진보신당의 강령에도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 계승’은 사라졌다. 진보신당은 강령에서 “자본주의를 극복”하자고 했지만 그 대안으로 “인간의 자유와 참된 만남의 공동체”라는 추상적 문구를 제시했다. 당시 진보신당 내에서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민주대연합 전략을 위해 사회주의 강령을 삭제한 후, 이제 새로운 진보대통합 정당에서도 이런 후퇴를 이어가려고 할 때 과연 진보신당의 평등파 지도자들이 그것을 과연 반대할 것인지 우려스럽다.

진보신당 독자파 리더들도 일관성 없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강령 개정 시도에 대해 김종철 진보신당 서울 동작당원협의회 위원장은 “대안 사회에 대한 논의가 더욱 촉진되어야 하는 마당에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마저 부담스럽다니 상당한 후퇴이자 현실 순응”이라고 비판했다.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도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강령 개정 등을 통해 추구하려는 민주대연합 전략을 비판한다. “우리가 싸워

야 할 대적은 통합론 배후의 ‘민주연립정부’ 노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신당 독자파의 대표적 인물인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에 대해 논평하며 “‘사회주의’ 등의 특정 용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독자파 리더들은 자주파가 진보대통합을 민주당과 계급 연합하는 지렛대로 쓰려 한다고 비판하지만 막상 야권연대 자체를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는다. 진보신당의 독자파 대부분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의 야권연대에 침묵했다.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내년 대선 후보 문제를 논하며 “범 민주당 세력과의 후보 단일화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의장도 “연립정부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고] ... [진보정당이] 규모도 더 커지고 내부 결속력이 강해졌을 때”는 연립정부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김종철 진보신당 서울 동작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자본주의 구조 변혁”이 중요하다고 급진적인 주장을 하면서

도, 막상 과제로는 노동자들의 세금을 더 걷는 “보편적 증세”를 내세운다. ‘보편적 증세’는 민주대연합 전략 주도자들도 주장하는 온건한 과제인데 말이다.

이것은 분당이 자주파와 평등파 모두를 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던 다함께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2. 사회주의 강령 삭제 논거들 반박

● 사회주의는 한국 사회 변혁의 목표가 될 수 없는가?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당 강령에서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 계승 발전” 등의 문구를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로 후퇴하려 한다.

“당이 처한 국내 정치적 상황이나 세계사적 변화의 흐름을 감안”(최규엽 민주노동당 강령개정위원장)해야 한다는 것이 후퇴의 명분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저항이 커지고 있다. 경제 위기와 독재와 제국주의에 맞선 아랍 혁명, 정부의 긴축 재정에 맞선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등의 저항과 파업이야말로 “세계사적 흐름”이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위기의 여파로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왔다고 걱정했다. 한국의 우파들도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반자본주의가 “세계사적 흐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조선일보》 2011년 4월 13일치). 지금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그 대안으로 내놓아야 할 때다. 당 강령에서 반자본주의적 요소를 약화시키고 사회주의 구절을 삭제하는 것

은 “세계사적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당 강령을 개정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주파가 추구하는 한국 사회 변혁 전략과 관계있다. 자주파는 “오늘의 한국 현실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 사회로 탈자본주의적 변혁(사회주의)은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자본가 계급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먼저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자주파는 스탈린주의적 변혁단계론에 입각해 한국 사회 변혁의 목표를 “진보적 민주주의 변혁” 단계로 한정한다.

사회주의는 시기상조?

스탈린주의적 변혁단계론은 상대적 후진국에서는 자본주의의 저발전으로 전(前)자본주의적 잔재가 많고 그로 말미암아 노동계급의 규모도 적기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건너뛰어 사회주의로 곧장 나아갈 수 없다는 이론이다. 자주파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중속적”이고 “기형적”인 “전근대적인 특성으로부터 오는 모순이 더 주요하고 당면하게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시기상조”이고 단계를 건너뛰는 “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적 소유와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주파의 주장과 달리, 오늘날 한국에서 민주주의 혁명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과 유리된 것이다. 과연 어느 정도가 돼야 사회주의 변혁이 가능할 만큼 성숙한 것이고, 어느 정도가 민주주의 변혁만이 가능할 만큼 미숙한 것인가.

자본주의는 나라마다 불균등하게 발전했고, 저발전 상태에 있는 나라가 일단 경제 발전을 시작하면 외국의 첨단 기술과 산업을 접목시키면서 발전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초고속 경제 성장과 함께 현대적 도시들이 개발되는 한편, 농촌 지역 대부분이 몇 세기 이상 뒤쳐져 있는 중국이 단적인 사례다.

더구나 한국 자본주의는 후진국이나 제3세계가 아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세계 12위이고 삼성과 현대 자본 등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세계 시장에 진출해 있다. 물론 한국이 미국의 하위 동맹자로 성장해 왔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것은 자주파가 주장하듯 “중속적” 자본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오늘날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됐으며,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최대 투자국도 미국이 아니라 유럽연합이다.

또, 한국 지배자들은 세계 곳곳에 군대를 파병해 놓고 있다. 이것은 단지 미국 제국주의의 압력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한 한국 국가의 능동적 전략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자본주의는 노동계급을 대

규모로 창출했다. 2010년 현재 경제활동인구 2천4백83만 명의 68퍼센트인 1천7백만 명이 임금 노동자다(통계청이 2010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또한, 지난 20년 동안 노동계급의 투쟁 경험과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노동계급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으로 떠올랐다.

한국의 사회 구조는 농민이 다수였지만 노동자가 주도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1917년 러시아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 농업 문제가 첨예하고 상대적으로 노동계급 수가 적었던 러시아조차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했는데, 봉건 지주도 없고 대규모 노동계급이 존재하는 한국의 사회 변혁이 진보적 민주주의 단계에 머물러야 할 이유는 없다.

1백 보 양보해 한국이 “미국 경제의 식민지 경제”라 하더라도 단계론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자본주의는 세계 곳곳으로 확산된다. 러시아의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매우 크지만 여전히 자본주의 관계의 지배라는 한계 내 머무르는 것”이고,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발전수준이나 사회 구조 혹은 전통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즉 모든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관계의 지배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고 지적했다. 그래서 “일국의 자본주의는 오직 세계경제의 일부로서 이해될 수밖에 없”고 “일국 경제의 특수성들은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세계경제라고 불리우는 보

다 차원 높은 실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일 것이다. 국제주의는 바로 이러한 세계경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일국적 한계 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조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더라도 혁명의 국제적 확산을 통해 모순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주의는 사회주의 혁명에서 있으면 좋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사활적인 것이다. 특히, 민족 억압이 존재하는 식민지 나라와 모순이 응축돼 있는 후진국의 사회주의 혁명일수록 더욱 그렇다. 이것이 바로 1917년 후진국 러시아 노동계급이 입증한 바다.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의 물질적, 사회적 조건의 성숙 여부도 일국 자본주의가 아니라 세계자본주의 규모에서 고찰”해야 한다.

적대 계급과 동맹 추구

자주파가 현 시기를 진보적 민주주의 변혁 단계로 보고 사회주의는 먼 미래의 일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의 실천적 함의는 적대 계급(민주당)과의 거의 상시적인 동맹, 즉 민주연합(인민전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변혁의 목표가 진보적 민주주의가 되면 반자본주의적인 투쟁과 노동계급의 자주적 행동은 부차적 요소가 된다. 즉, 진보적 민주주의 전략은 자유주의 부르주아 분파와 협력을

위해 반자본주의 전략을 의도적으로 기각한다.

자주파는 “사회주의적 변혁을 당면 주요 과제로 내세운다면 기득권 세력과의 치열한 투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적 소유와 시장을 부정하지 않는” 선에서 “중소자본가 계급(또는 양심적 자본가)까지 포함”한 “계급적 연합 정권”, “공동정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단계‘변혁’론에 따라 자주파는 2003년에 민주노동당 강령에서 사회주의 문구를 삭제하려 했다. 당내 반발로 실패했지만 2009년 정책당대회를 앞두고 또다시 강령을 개정하려 했다. 사실 민주노동당의 자주파는 강령 개정 시도가 여러 차례 실패했음에도 진보적 민주주의 변혁 전략을 당의 핵심 노선으로 삼고 실행에 옮겨 왔다. 특히, 2010년부터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노골적으로 민주당과 상시적 동맹 전략을 시도해 왔다.

민주연합에서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은 근본적 사회 변화에 대한 논의를 훗날로 미루고 민주당과 함께하기 위해 진보진영의 강령, 공약, 이데올로기 수준을 민주당의 협소하고 저급한 그것에 맞춰 아래로부터의 노동계급 투쟁을 자제시키는 구실을 하게 된다. 지난해 민주당이 KEC 점거 파업의 중재자로 나서자,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지도부는 민주당을 추수해 성과도 없이 점거 농성을 해제시켰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올해 6월 정책당대회에서 또다시 강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후 조치이고, 향후 통합 진보정당의 강령에 사회주의 변혁 전략과 연관된 문구를 넣지 않으려는 사전 작업과 같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이윤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려고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진보진영은 진보적 민주주의만 요구하며 싸워야 하는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해 적대 계급과 전략적 동맹을 해야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있는가.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이 민주주의 요구와 반자본주의 요구를 결합시키려 한다면 진보진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르크스는 “어떤 한 형태의 계급 지배와 타협하거나 민주주의 단계에 멈추지 않고 사회주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혁명의 모든 연속적인 단계는 그 이전 단계와 중첩”된다고 했다. 마르크스가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은 당시 유럽 전역을 휩쓴 1848년 혁명을 기점으로 자본가 계급이 구질서보다 노동계급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자본가 계급은 항상 구질서와 화해하고 노동계급을 탄압했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특히, 자본가들의 이윤에 타격을 주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공장 점거 등은 아무리 “양심적 자본가”라 해도 군대·경찰 등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탄압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계급이 정

치 권력뿐 아니라 자본주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 권력에도 도전해야 한다. 즉, 민주주의와 반자본주의 요구를 결합시켜야 한다.

한국에서도 민주당은 자본주의 국가를 지지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갈등은 계급 분할이 아니라 정치 전략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두 세력이 자주 쉽게 타협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자본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려워한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과 전략적 동맹을 통한 민주주의 성취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성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노동당 강령은 반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 계승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회주의는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한다고 돼 있지, 그것이 구체적인 무엇을 뜻하며 어떻게 그 사회에 이를 수 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정당이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옹호해 온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당 안팎 좌파들의 토론과 논쟁 지형 수호에 보탬이 돼 왔다.

사회주의는 사람들이 꿈꿔 온 이상 사회의 청사진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등장할 사회 형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자운동의 목표를 사회주의라

고 정의했다. 사회주의는 똑똑한 사람들이 사회에 적용하려고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기업주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을 표현한 것이다. 또, “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 주요 생산수단(토지, 공장, 기업체, 은행 등등)에 대한 통제,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따른 생산, 계급 분단의 철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마르크스가 이해한 사회주의의 근본적 특징만 몇 가지 열거해도 진정한 사회주의는 중국·북한·쿠바 등의 가짜 사회주의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에는 노동계급의 자기 활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사회주의 강령 삭제에 반대해야 하고, 진보적 민주주의가 계급협조주의로 향하고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 노동자 정당이 아니라 “국민정당”이 돼야 한다?

민주노동당 자주파는 민주노동당이 “협소한 계급정당”이 아니라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이어야 한다면서 노동계급 중심성을 공격한다. 이들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적 소유관계 철폐와 사회주의적 소유관계 수립을 당면 목표로 내세우지 않”고 “자본가 계급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다르”기 때문에, “중소자본가와 상층 중산층의 이익도 배려하고 고

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민주노동당 강령개정위원회 토론 자

료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 — 진보적 민주주의’).

한마디로 자주파의 “대중정당”론 — 정확히 말하면 “국민정당”론 — 은 진보정당이 선거 정당으로서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을 넘어 훨씬 더 광범한 사람들 — “영세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 — 에게서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의 “좌파 노동계급 정당”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당의 계급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자주파가 주창하는 ‘자주적 민주정부’는 계급 연합 정권이다. 이들은 “미국과 사대매국적 지배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연합”해 “민중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민중이란 “외세와 소수 지배 세력들을 제외한 …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인텔리, 도시 자영업자, 애국적 종교인과 군인, 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지지하는 중소자본가 집단”을 일컫는다. 이들은 “민중 정권”에 “민족 자주경제를 지지하는 중소 자본가 계급 역시 연대 연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정권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이 정권은 “계급 연대·연합 정권”이므로 “특정 계급의 배타적 정권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1935년 코민테른 7차 대회에서 채택됐고 남한에서도 해방 정국 이래 거듭 추구돼 재앙을 낳았던 인민전선 전략의 재판이다.

현재 자주파의 이 전략은 이미 선거 영역을 넘어 계급투쟁의 영역으로까지 적용 범위가 확장됐다. 그래서 민주당과 특정 사안을 두고 불가피하게 연대(전술적 제휴)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상시적으로 연대(전략적 연합)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자주파는 강령 개정을 통해 자신들의 실천을 이데올로기적으로까지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노동계급 기반을 넘어 “좀더 광범한 계급·계층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의 외연을 중간계급으로 넓히려다 노동계급에 내린 뿌리마저 약화시키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또, 노동계급의 저항을 무디게 한다는 점에서 해악적이다.

현재 진보정당들이 노동계급 속에 충분히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 없다. 분당 이전에 민주노동당이 성장하던 시절조차 민주노동 총 조합원 70만 명 중 5퍼센트 가량만이 당에 가입했고, 전체 1천5백만 노동자 중 당에 가입한 노동자는 0.5퍼센트도 안 됐다. 따라서 새로운 진보정당은 오히려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들의 입당 확대와 노동계급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당원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또, 당의 노동계급 기반 강화가 노동계급이 아닌 피억압 대중의 문제를 도외시한다는 뜻도 결코 아니다. 오히려 노동계급은 다른 피억압 사회집단들을 방어하는 ‘호민관’이 돼야 한다. 억압을 종식시킬 진정한 동력은 노동계급에게 있다.

그런데 노동계급의 힘과 다른 피억압 대중의 힘을 동일시하면, 자본주의에 맞설 수 있는 진정한 힘을 무시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진보정당은 노동자 투쟁에 진지하게 헌신해야 한다.

주도력

자주파는 민주노동당이 노동계급 기반에서 탈피해 중간계급에게 다가가야 하고, 심지어는 중소 자본가들에게까지 그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

그동안 자주파는 민주‘노동’당의 명칭에 함축돼 있는 계급 정치 개념을 비판해 왔다. 이들은 계급이 아니라 민족 또는 국민의 이름으로 말하려 한다. 계급은 민족 또는 국민에 비해 “협소”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급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세계적 성격 때문에 민족 또는 국민에 비해 훨씬 보편적이다. 국경과 인종과 성·성 지향의 차이를 넘어 단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주파는 노동계급과 다른 피억압 민중의 차이를 주목하지 않는다. 노동계급은 그저 여러 부문들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주도력을 발휘하도록 고무될 때만 다른 피억압 대중에 대한 노동계급의 주도력이 강화될 수 있고, 계급의식이 제고되고 조직이 강화되고 자신감이 증대된다.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동맹은 모든 정치 운동과 변혁에서 제기되는 문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느 계급이 동맹의 헤게모니

(주도력)를 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간계급은 항상 자본가 계급과 노동계급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하는 존재다. 또, 중간계급 내부에는 온갖 이질적인 요소들이 뒤섞여 있다. 이 계급의 최상층은 자본가와 직접 연계돼 있다. 최하층(가령 영세 노점상)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가까운 ‘비임금 근로자’, 즉 반(半)프롤레타리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계급은 독자적 강령을 가질 수 없다.

자영업자 같은 계층은 다양한 정치적 방향으로 이끌릴 수 있다. 이들은 노동자 운동이 강력하고 진정한 대안을 제시할 때 노동계급을 지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동적 정치를 추구하는 운동의 대중적 기반이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진보정당의 계급 기반에서 농민을 노동자와 동등한 반열에 올려놓아서도 안 된다. 물론 많은 한국 노동자의 부모·형제가 농민이고 농촌에서 살기에 노동자들이 농민의 고통에 깊은 연민의 정을 느끼고 농민의 요구에 공감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 — 계급 정치 — 는 온정주의에 바탕해 결정될 수 없다.

특히, 사회주의 정치는 노동계급의 (궁극적)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노동자 한 사람, 또는 심지어 노동자 전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바탕으로 노동계급의 정치 강령을 작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민은 단지 수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계급적 성격상 주

력군이 될 수 없다. 농민은 내부적으로 분화해 있어서, 역사가 보여 줬듯이 결코 독자적으로 정치적 구실을 할 수 없다. 농민이 사회 변혁에서 중요한 구실을 할 때는 다른 계급에 의해 정치적으로 지도될 때다.

한국 농업·농촌의 위기는 한국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깊숙이 편입하며 성장해 온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다. 도시 공업의 높은 생산성과 이윤을 바탕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에서 생산성과 이윤이 낮은 농업에 대한 투자는 늘 뒷전으로 밀렸고 농업과 농촌은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농민들은 더 많이 생산할수록 더 가난해졌다. 이것은 과잉 생산이 가격 하락과 소득 감소를 낳고, 따라서 빈곤을 증대시키는 자본주의 시장질서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업의 진정한 희생과 농민의 생존권 보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가 돼 버렸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말처럼, 자본주의 착취 관계의 사슬은 그 사슬이 버려지는 곳, 즉 생산의 현장에서 끊어져야 한다. 근본적 사회 변혁의 성공은 다른 사회세력에 대한 노동자의 헤게모니에 달려 있다.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착취 체제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 덕분에 자본주의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노동계급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 소수일 때조차 집중돼 있다면 그 사회의 결정적 생산력을 손아귀에 쥔다. 노동계급 비중이 큰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이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민중의 거리 시위도 위력적이지만, 이것은 자본주의의 심장인 이윤에 타격을 가하는 노동자 파업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노동계급은 농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과 생계 보장을 요구하며 자본가들과 그들의 국가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농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세력은 바로 노동계급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고, 이를 통해 농민들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중소 자본가

자주파는 진보정당이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려면 중소 상공인들 속에서 당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말하는 중소 상공인에는 영세 자영업자뿐 아니라 중소 자본가도 포함된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중소 자본가들은 대부분 재벌 지배체제의 경제적 희생양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민족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계급이므로 민중의 개념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한다(『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 — 진보적 민주주의』). 또, 중소 상공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집권은 고사하고 선거에서 의미 있는 지지를 얻기 힘들고,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물론 중소 상공인이 개별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해 당의 원

칙과 규율을 따르고자 한다면 좋은 일이다. 이때 자기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계급을 배신하고 노동계급의 규율에 복무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독일의 사회주의자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부르주아 출신이었지만 노동자 운동과 그 정당의 건설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일상으로 “중소 상공인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정확히 당의 노동계급 이익 옹호와 충돌을 빚는다. 특히 중소 자본가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중소기업 상한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1천 명 미만과 자산 총액 5천억 원 미만이다 — 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노동자 운동에 해악적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린다는 것은 얼마간 사실이지만, 둘 간의 “불공정성”만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동시에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일반으로 말해, 더 열악한 조건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불리함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중소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당 정책에 반영한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중소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감안해 당의 강령과 정책을 수정하려 한다면, 반동의 공세에 직면했을 때 계급 협력 노선에 손발이 묶여 노동계급의 저항을 마비시키는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대기업들(67.2퍼센트)만이 아니라 대다수 중소기업들(65.2퍼센트)이 한미FTA를 찬성한 것이나(대한상공회의소 조사),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밤에 잠 좀 자자”며 투쟁을 벌이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과 조치”를 촉구한 것을 보면, 이들이 노동계급과 한 편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래서 자주파가 외세와 대재벌을 제외한 ‘중소 자본가’와 계급 협력과 화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노동자 운동에 해악적이다. 투쟁하는 양대 계급 사이에서 공평무사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말리는 구실을 하고 있음을 달리 말한 것에 다름 아니다.

진보정당의 기반을 중소 자본가에게로 넓히는 게 선거에 항상 이로운 것도 아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급투쟁 수준이다. 계급투쟁이 침체기라면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소수일 것이고, 반대로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계급투쟁이 고양된다면 대중의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설득할 수 있게 된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10석을 얻고 20퍼센트 지지율로 치솟은 때는 2004년 노무현 탄핵 반대 운동, 즉 대중 투쟁이 벌어진 직후였다.

중소 자본가를 당의 기반으로 삼는 것은 앞으로 조직 노동자를 넘어 미조직 노동자들의 광범한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진보정당의 핵심 당면 과제를 심각하게 방해할 것이다. 진보정당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보다는 그 기업주의 이익 대변에 더 열심이라면, 진보정당의 노동계급 기반 확대 작업은 요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비정규직의 많은 부분이 중소기업에 있는데, 당이 한편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다른 한편에서는 중소 자본가들의 기반 확대를 말한다면 실천에서 긴장을 빚을 것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진보정당이 노동계급 기반을 넘어서 심지어 중소 자본가 등 부르주아 계급과 협력하는 것은 이들을 견인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동계급이 그쪽으로 견인되는 사태만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자주파의 계급협력 사상은 반동에 맞선 노동계급의 저항을 마비시키게 되는 것이다.

1930년대 중엽에 트로츠키는 다음 같이 지적했다. “이러한 착취는 위계적으로 조직돼 있다. 착취자—하위 착취자—하위 착취자의 하위 착취자 등등의 식으로. 이런 위계 체계를 통해 착취자들이 국민의 대다수를 예측시킬 수 있다. 국민이 하나의 계급적 핵심을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으려면 이념적으로 재구성돼야 하는데 이것은 프롤레타리아가 ‘민중’ 또는 ‘국민’ 또는 ‘민족’으로 용해되지 않을 때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진보정당의 노동계급적 성격을 희석시키려는 자주파의 시도는 좌절돼야 한다. 오히려 새로운 진보정당은 노동계급적 성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 진보대통합을 위해 사회주의 강령을 삭제해야 한다?

진보대통합 논의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 강령이 별로 문제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통합하자면서 왜 강령을 더 자주파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왜 진보대통합을 앞두고 당 강령을 손질하려는 것일까? 어차피 통합 진보정당에서 새로운 강령 제정 작업을 새로 해야 할 텐데 말이다.

6월 4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이정희 대표는 개정 강령안이 당 대회를 통과하면, 새 강령이 통합 협상에서 민주노동당의 초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사회주의 관련 구절’을 삭제해 앞으로 만들 통합진보정당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진보대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광범위한 세력을 포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한겨레〉)인 것이다.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강령과 정책을 온건화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연석회의)가 채택한 진보대통합 최종 합의문에서 애초 초안에 있던 “자본주의 극복” 문구가 빠졌다. 연석회의에 참가 신청을 한 다함께가 ‘반자본주의 단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민주노동당의 현 강령에 포함돼 있는 ‘사회주의 관련 구절’이 외연 확대를 가로막았던 것인가?

그런 생각은 민주노동당이 창당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성장한 것, 2004년 총선에서 열 석의 의석을 차지하며 약진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당의 외연이 축소된 2008년 분당 사태 때도 현 강령이 문제가 되진 않았다. 그 뒤, 진보신당을 창당한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기층 당원들이 탈당한 것도 상층 지도자들이 강요한 분열에 실망했기 때문이었지 강령의 사회주의 구절 때문이 아니었다.

지금의 당 지도부인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 NGO 성향의 광정숙 의원 등이 2008년에 민주노동당에 가입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주의 강령’이 문제됐던 것이 아니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사회주의 강령’이 외연 확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은 너무 현실을 단순화시킨 것이다.

현대적 의회주의 정당들은 득표를 위해 ‘국민정당’을 표방하지만, 정강·정책과 실천은 고유의 계급 기반에 바탕한다.

그래서 대자본가의 당인 한나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노동계급에게 표를 구하지만, 노동계급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라는 민주당이 부자 증세를 꺼리고

FTA에 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이 비록 온전한 사회주의 정당도 아니고 사회주의적 정치 실천을 한 적은 없지만, 현재 당 강령의 ‘사회주의 관련 구절’은 민주노동당이 ‘계급정당’이고 다소 모호하더라도 ‘반자본주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상징적 표현이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통합 진보정당의 강령 초안에서 ‘사회주의 관련 구절’을 빼려는 것은 ‘계급정당’의 성격을 후퇴시키거나 완화하려는 시도다.

사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진보대통합을 민주대연합이라는 계급연합 전략의 부속물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국민참여당처럼 개혁적이지만 친자본주의적인 당과 연합(심지어는 합당)하고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추진하려고 좌파적 강령을 삭제하려는 것이다.

적지 않은 활동가들이 정권 교체의 필요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타협과 후퇴를 용인하려 한다.

그러나 1995년에 국유화 강령을 폐기한 영국 노동당의 ‘신노동당’ 노선 채택 과정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재앙인지 알 수 있다. 당시 노동당 지지자들 상당수가 블레어의 신노동당 노선을 싫어했다. 좌파 지도자 아서 스카길은 “당헌 4조(국유화 강령)가 없다면 노동당을 자유민주당이나 보수당과 구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니 블레어의 한 전기작가는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많은 노동당 활동가들은 일종의 정신분열증에 걸렸다. 그들은 다음 총선에서 노동당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최상의 책임자가 블레어라고 생각해서 그를 지지했지만, 사실은 블레어의 정책과 방침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쓰디썼다. 노동운동이 노동당을 압박하기는커녕 그 불모가 됐다. 노동조합의 권리는 제약당했고, 복지는 후퇴했다. 결국 지금은 보수당이 재집권해 세계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긴축정책을 밀어붙이는 상황이 됐다.

한국의 좌파들이 블레어 노선을 수용한 영국 노동당 활동가들의 오류를 반복할 이유는 없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에 드높고 여러 노동자 투쟁과 학생 투쟁에 대한 지지도 높다.

민주당이 말로라도 복지와 진보를 말하는 것은 민주대연합의 청신호가 아니라 계급세력관계가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뜻이다.

● 사회주의 강령이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는 사회주의 강령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역사적 사례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영국 노동당 사례를 보자. 영국에서는 제1차세계대전과 반전

분위기 속에서 조직 노동자들의 입당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1918년 노동당이 사회주의 강령을 채택했다. 1929년 영국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노동당 정권을 수립하게 될 때에도 사회주의 강령은 ‘방해물’이 되지 않았다. 1964년 다시 정권을 찾아오는 데서도, 1974년 10월 총선에서 319석이라는 최대 의석을 차지하는 데서도 사회주의 강령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1974년 총선 승리는 1972~74년에 조선소·공장·사무실·작업장을 점거하는 투쟁이 200건 넘게 일어나고 영국에서 수십 년 만에 정치파업이 다시 등장하는 계급투쟁의 고양기 속에서 이뤄졌다.

스웨덴은 어떤가.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민주적 사회주의” 강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번의 선거에서 우파를 제칠 수 있었다.

반대로 사회주의 강령을 삭제한 뒤에 집권에 실패하거나 선거에서 참패를 겪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2008년 이탈리아 총선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참패하고 국회에 단 한 명의 좌파 의원을 세우지 못한 까닭은 중도좌파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한 군대는 철수시켰지만 이탈리아가 나토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지지하는 썰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미 이탈리아 공산당은 1991년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당 강령에서 삭제했고, 당명도 좌파민주당으로 변경한 바 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지지율이 급추락해 최근 선거에서 우파

에 연속 패배한 이유도 사회주의 강령 때문이 아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얻어 낸 복지 정책을 후퇴시킬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유럽의 노동당이나 사회민주당이 선거에서 우파에게 패배한 주된 원인은 사회주의 강령 때문이 아니라 우파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타협하고 절충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 “21세기 사회주의”를 내걸고 있는 정치세력이 10년 넘게 집권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주의 강령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우익 쿠데타에 맞서 노동자 수십만 명이 거리에 나와 우고 차베스와 그의 정부를 방어한 투쟁 덕분에 “21세기 사회주의” 정부가 집권할 수 있게 됐다. 우고 차베스가 대중의 지지를 예전만큼 얻지 못하는 까닭은 “사회주의”를 내걸어서가 아니라 우파에 계속 타협하려 하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선거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급투쟁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도 적용된다.

“분단국가라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무색하게도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민주적 사회주의”를 강령으로 갖고 있었음에도 국회의원 열 명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그 승리의 배경은 노무현 탄핵 반대 투쟁 물결이었다.

계급투쟁이 침체기라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극소수일 것이고, 반대로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계급투쟁이 고양된다면 대중의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설득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사회주의 강령 여부가 선거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계급투쟁이 얼마나 활발하게 벌어지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고양되느냐가 가장 직접적인 변수라는 점이다. 따지고 보면 민주노동당에서 2003년에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노동계급 중심성을 강조하는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반자본주의 운동 덕분이었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입장이 일관되려면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목표가 견지돼야 한다. 진보적인 대안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당장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너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단지 현실이 되기에 너무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이 거리로 나오고 기존의 관념과 정치세력이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에는 사회주의적 강령에 거부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급진적인 대안을 포기하지 않은 진보정당에 더 커다란 매력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진보정당에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냥 보수적일 거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어떤 상황에서 변화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통찰이 필요하다.

● ‘운동권’ 정당에서 정책 정당으로?

민주노동당이 ‘운동권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10년의 역사에서 거듭 있어 왔다. 특히 선거에서 기대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등 위기론이 나올 때마다 ‘운동권’ 정당에서 정책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병통치약처럼 제기되곤 했다.

물론 진보정당이 대중의 요구를 표현할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정책 정당이 단순히 그런 정책을 가진 정당을 뜻하는 것이라면 문제 될 게 없다.

그러나 이렇게만 보면 민주노동당이 ‘정책 정당’으로 발전하는데 ‘운동권 정당’이라는 사실이 특별히 문제가 될 까닭이 없다.

따라서 진정한 쟁점은 첫째, ‘운동권 정당’ 즉, 민주노동당이 운동권이 만든 당이고 기층 운동에 뿌리내린 당이며 대중 운동을 건설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운동권 정당’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개 ‘운동권’은 ‘대중적’이지 않다는 뜻을 함축한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운동권’은 인기가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해 ‘민주노동당 10년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민웅 교수는 “민주노동당이 40대 운동권 이미지로는 젊은 세대에 호소력을 갖추기 힘들다”며 “민심에 스며드

는 정치 역량을 갖추는 게 과제”라고 평가했다.

물론 지금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진보정당들이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분열한 진보정당들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고 단결해 싸우게 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이 절실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진보대통합 논의가 안고 있는 모순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지한다.

그러나 지배자들과 우파 언론들이 만들어놓은 진보정당에 대한 편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도 안 된다.

민주노동당 지도부 자신이 늘 강조해 왔듯이 당비를 내고 당 활동에 참여하는 진성당원으로 따지면 민주노동당은 다른 어느 주류 정당 못지 않게 튼튼한 대중적 기반을 갖고 있다. 2009년 말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합해 진성당원의 수는 4만 8천여 명이다. 분당으로 떨어져 나간 당원들까지 합친다면 지지자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청년 학생 당원들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해결해야 할 숙제이지만 그것도 다른 정당들에 비해 눈에 띄는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에 젊은 청년들의 눈길을 끌 만한 진보적 정책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문제는 주류 정당들이 선거나 여론조사 등에서 당원 수에 비해 훨씬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

하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자주파는 그 이유를 당의 사회주의 강령에서 찾으려 한다. 강령 개정 논쟁 과정에서 또다시 ‘운동권 정당’ 비판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자주파는 사회주의 강령이 투표에 언제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그러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급투쟁 수준이다. 계급투쟁이 침체기라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극소수일 것이고, 반대로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계급투쟁이 고양된다면 대중의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설득할 수 있게 된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열 명을 탄생시킨 배경은 노무현 탄핵 반대 투쟁 물결이었다.”(김인식, <레프트21> 52호)

따라서 ‘운동권 정당’에서 벗어나기는 커녕 운동의 성장에 더 많이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정당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쌓는 것이다.

국민정당

‘운동권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속뜻은 정당이 운동 그 자체와는 일정한 거리를 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종의 역할분담론인데 현재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자주파는 2006년에도 단일전선체(현 진보연대) 건설을 추진할 때에도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런 역할분담론의 실천적 결론에 대한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의 비판은 5년이 지난 지금 더욱 현실적이다.

“즉, 민주노동당은 원내 활동에 주력하고, 대중투쟁은 단일전선체가 담당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원내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은 지방선거 이후에 제기되고 있는 ‘운동권 정당 비판론’, ‘정책정당론’ 등과도 맥이 닿는다.

“민주노동당이 중소기업의 대중행동전에 일상적으로 앞장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당이 아무 때나 이른바 장외투쟁을 벌이게 되면 대중들로부터 ‘운동권당’ 소리를 듣기에 딱 알맞다’는 것이 역할분담론의 기본 발상이다.

“하지만 원내 활동만으로 집권을 이룰 수는 없으므로 ‘당 홀로 집권을 위한 모든 정치활동을 도맡아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적절한 역할분담을 모색해야 한다. … 대중단체연합체가 대중정치투쟁을 중심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입장은 얼핏 대중투쟁과 의회활동의 절묘한 결합처럼 보인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회활동 전담기구로의 전략이다.

“의회활동은 노동자 정당이 해야 할 여러 활동 가운데 단지 하나에 불과해야 한다. 더구나 국회의원이 9명뿐인 민주노동당의 현실에서 당 활동이 의회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은 원내에서 다른 정당과의 동맹을 전제로 한 발상이다.”(김하영, <맞불> 4호)

운동권 정당을 비판하고 정책정당론을 제시해 온 인사들이 내놓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면 좀더 그림이 뚜렷해진다.

분당 당시 가장 강력히 '운동권 정당'을 비판한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대중 투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로서의 당"보다 "제도정당으로서 국민의 평가와 책임의 원리에 순응"할 것을 강조했다. 당시 정태인 씨는 '진보신당의 국가비전'을 발표하며 "기업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노동자는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는 "생산성 타협"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2006년 지방선거 이후에도 심 전 의원은 "선거 전술을 봐도 성장 대 복지 대결 구도에서 절대 복지 쪽으로 표가 안 온다" 하며 성장 얘기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일찌감치 '운동권 정당'을 비판한 주대환 씨는 '한나라당과도 공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책정당론을 제기하는 이들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개발하고 제시해 온 진보적 정책들에 공통적인 결함이 있다고 본다. 부유세, 군비축소 등을 통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같은 정책 대안들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요구 수준을 낮춰야 —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표면상으로는 '정책 정당'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실제 내용은 기존의 '정책과 주장'을 우경화하자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책정당론의 요지다.

그러나 단지 요구 수준이 높다고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고 요구 수준을 낮추면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은 기계적이다.

진보적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무엇보다 대중투쟁 수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그것을 실현시킬 사회적 세력이나 운동이 충분히 성장해 있지 않으면 대중의 눈에 실현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다.

예컨대 지금 민주당이 내놓는 무상복지 공약들에 대한 대중의 미지근한 태도가 이를 잘 보여 준다. 과거 민주당의 집권 경험을 볼 때 민주당이 이를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다 불안정한 경제 위기 속에서 복지 확대에 대한 자본가들의 저항은 뻔한데 이들을 강제할 강력한 운동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운동의 성장은 이런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

물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대중운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완전한 정책적 설계를 마쳐야만 대중운동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대중정당으로 성장하고 투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정책 개발과 운동 건설 둘 다 필요하다. 어느 것도 다른 것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운동이다.

따라서, “우리는 ‘운동권’임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대중은 동이야말로 사회 변화의 가장 주된 동인입니다. 물론 정책 선전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을 때라야 사람들은 당 후보들의 공약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정책이나 공약 선전이 공명을 얻으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맞불〉 72호)

● 사회주의 강령이 국가보안법 탄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강령에서 사회주의 문구를 삭제하자는 사람들은 현 강령이 국가보안법상 탄압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민주노동당의 역사에 비춰 봐도 별 근거 없는 주장이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후 10년 넘게 현 강령을 유지해 왔지만 국가가 이 강령을 문제 삼아 민주노동당 자체를 탄압한 적은 없었다. ‘공안’ 당국이 민주노동당의 ‘민주적 사회주의’ 강령까지 보안법의 탄압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도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마녀사냥해 민주노동당 전체를 분열·위축시키려는 의도이긴 했지만,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 강령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었다.

또, 민주노동당 당원들 일부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당 조직 자체를 직접적 대상으로 삼은 국가보안법 탄압

은 없었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후원을 받는 대중적 진보정당을 국가보안법으로 마녀사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 옹호세력(근래에는 대중단체가 아닌 소규모 단체와 일부 개인들이 마녀사냥의 주된 대상이 되곤 한다)과 혁명적 사회주의자들(1990년대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과 최근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이 대표적이다)을 주된 탄압 대상으로 삼아 왔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려고 하는 진정한 이유는 국가 탄압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다.

사실, 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이 강령 후퇴의 근거로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주장은 민주대연합 전략이 민주노동당의 급진성과 투쟁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국가보안법 탄압을 피하기 위해 강령을 후퇴시켜야 한다는 논리라면, 국가보안법이 탄압의 대상으로 삼는 북한과의 접촉과 교류, 미국 제국주의 반대 주장 등도 하지 말자고 할 텐가. 당원들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을 때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탄압 때문에 사회주의 문구를 삭제하자는 주장은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자는 게 아니라, 투쟁을 회피하자는 방향을 내포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에 맞선 투쟁을 회피하고 투항했을

때 어떤 쓰디쓴 결과를 낳는지 경험한 바 있다. 2007~2008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을 이용한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에 직면해 당시 민주노동당 비대위가 기소된 당원들을 제명하려고 한 시도는 민주노동당을 성장시키기는커녕 약화시켰고,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당원과 그 가족 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민주노동당은 ‘종북주의’ 정당으로 낙인 찍혀 위축되고 분열했고, 우파들은 마녀사냥이 먹혀드는 것을 보고 기세 등등했다. 당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당원들을 방어하고 제명에 반대했던 캠페인이 있었기에 간신히 제명 결정을 막고 진보운동의 대의를 지킬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경험이 준 교훈을 깊이 새기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가보안법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한국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완성’됐고,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는 주장이 진보진영에서 유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위기에 처한 정권의 탄압 도구가 되는 현실만 봐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에 맞선 투쟁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서 투쟁해야 한다. 북한을 지지하건 반대하건, 사회주의를 지지하건 반대하건 그것은 우리 운동 내부에서 토론할 문제이지 탄압받을 문제가 아니라는 원칙을 공공연하고 분명히 옹호해야 한다.

또한, 진보적 대중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 강령을 유지한다면 사회주의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탄압받는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인용해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이 탄압을 피하려 사회주의를 삭제한다면 우파들을 고무하고, 다른 사회주의 단체들을 마녀사냥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다. 당장 우파들은 ‘민주노동당처럼 다른 단체들도 비현실적인 사회주의 따위는 버리라’고 주장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탄압받는 사람들의 방어막과 울타리가 돼 줄 책무가 있다.

최근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는 올바르게도 앞으로 건설될 진보대통합당의 20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꼽았다. 이런 과제를 실제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탄압을 모면하기 위해 강령을 후퇴시켜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 당원들이 사회주의 강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 문구를 삭제하려는 자주파는 “당원의 눈높이”에 맞춰 당 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원들이 사회주의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강령의 사회주의 구절을 삭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원들이 모두 사회주의자는 아니므로 일견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자주파는 북한의 3대 권력 세습에 대해서는 6·15 정신에 따라 ‘내정 불간섭과 상호존중’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과연 북한의 3대 권력 세습이 당원들과 일반 노동자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가?

마르크스는 “일상적인 시기에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며, 그것은 “지배계급이 물질적 생산수단뿐 아니라 정신적 생산수단도 통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이 지배계급의 사상이 아니므로 일상적 시기에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를 진보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정당의 강령이 일상적 시기의 대중의 의식을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다. 그랬다가는 진보정당의 강령이 대중의 온갖 편견이 반영된 잡동사니가 될 것이다.

강령은 무엇인가? 당의 강령 — 당의 기본 원칙들 — 은 노동계급의 역사적 잠재력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서 강령은 일반적으로는 사회의 물질적 조건으로부터, 특수하게는 사회 내부에서 노동계급의 지위로부터 도출된다.

즉 당의 강령은 대중의 현재 의식 수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물질적 조건과 사회를 변화시킬 주체인 노동계급

대중의 착취받고 억압받는 지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모름지기 진보정당의 강령은 자본주의 계급사회라는 물질적 조건 때문에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노동대중의 궁극적 해방을 위한 사상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현 강령이 “우리가 만들 세상”으로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고 쓰고 있는 것은 여기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얼마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의 현재 의식에서 출발할 수 없는 강령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강령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강령의 원칙적인 사상을 현실에 적용해 노동계급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전략과 전술이다. 민주노동당 식으로 말하자면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강령과 달리 “전략과 전술의 출발점은 그러한 물질 세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의식이다.”

이러한 전략과 전술을 올바르게 구사하느냐에 당의 성장과 쇠퇴가 좌우된다. 민주노동당도 사회주의 지향을 밝힌 강령 구절 때문에 위기를 겪거나 당세가 약화된 것이 아니다.

사실 강령을 꼼꼼히 따져보는 당원은 많지 않다. 당원들의 강령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은 민주노동당과 성격이 비슷한 영국 노동당에서도 볼 수 있다. 영국 노동당 강령 중 ‘생산수단의 공

동소유'를 규정한 “당헌 4조 폐기 시도 때문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직후였고, 노동당 당원중에 당헌 4조가 분명히 적혀 있었는데도 조사 대상 당원의 40%는 당헌 4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많은 경우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주변의 동료, 선후배 당 활동가들의 헌신적 활동이나 당을 지지하는 소속 노동조합에 대한 연대, 그리고 당의 진보적 활동과 스타 진보정치인의 활동에 매료되어 당에 가입한다.

그리고 이렇게 당에 가입한 당원들이 당에 대한 일체감이 약화되고 또 종래에는 당을 떠나게 되는 것은 사회주의 강령 구절이 아니라 당의 일상적 정치실천에 실망해서다. 강령은 상대적으로 먼 미래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의 일상적 실천은 당장에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젊은 당원들이 당에 실망하고 당의 청년 지지층이 빠져나가고 있던 2005년을 돌아보자. 이 시기는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과의 공조에 목을 매던 시기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자주파, 평등파 할 것 없이 “노무현 정부의 성공이 진보에 유리하다”며 노무현 정부 구하기에 나섰다. 당시에는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과 4대 개혁입법 좌절 등 개혁 배신으로 그의 지지자들 중 절반이 대거 이탈하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노무

현과 열린우리당을 왼쪽에서 선명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혁을 염원하는 대중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반대의 길을 걸었다. 결과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이 약 50만 명이 이탈한 것이었다.

그 외에도 민주노총 일부 상층 관료들의 부패를 눈감아 주는 듯한 당 지도부의 태도, 북한 핵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자주파의 태도, 비정규직의 목소리 구실을 하던 단병호 의원의 기간제 고용 사유 확대 등 비정규직 법안의 불필요한 후퇴 등 당장에 중요한 현안들에서 대중의 정서와 거리가 먼 지도부의 태도 때문에 당원들과 당 지지층은 실망하고 멀어져 갔다.

가장 많은 당원들이 당을 떠난 2008년 분당도 당 강령의 사회주의 구절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당 권파의 패권주의와 북한 핵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가 주요한 쟁점이었다.

이번 사회주의 구절 삭제 시도도 당원들의 아래로부터의 제기가 아닌 자주파 지도부로부터, 즉 위로부터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당원들의 정서를 핑계대지만 그 방향은 우경화를 가리키고 있다.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와 나아가서는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톤 다운의 일환인 것이다.

3.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민주노동당 자주파 지도부는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 계승”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로 그것을 대체하려 한다.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번 정책당대회를 앞두고 새세상연구소가 발표한 두 가지 문건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 —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의 정책과 노선〉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새세상연구소 박경순 부소장이 집필했다는 이 글에서는 일단 ‘진보적 민주주의’가 제기되는 배경으로 한국 사회의 “종속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의 식민지 경제”이고 “한국 신자유주의는 종속성을 본질로 하는 종속적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것이다. 또한 “한미 지배 종속관계가 바뀌지 않았으며, 바로 이 점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자본주의의 정상적 발전을 ... 가로막고” 있는 “종속성”의 문제를 분석해야만 올바른 전략과 과제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런 ‘종속성’과 ‘한국 자본주의의 비정상성’을 간파하는 “계급주의적 이론과 방법론”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가 ‘종속성과 비정상성’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탈자본주의적 변혁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의 현실에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자체를 폐절시키는 사회주의적 변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적 변혁보다 우선 필요한 것은 “초국적 독점 자본과 삼성 공화국을 통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라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자본의 수탈 그 자체라기보다, 종속적이며 기형적이며 전근대적인 특성으로부터 오는 모순이 더 주요하고 당면하게 해결해야 할 절박한 모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당면 주요 과제로 내세워야” 하고 여기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리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소유관계 철폐와 사회주의적 소유관계 수립을 당면 목표로 내세우지 않”으며 “자본가 계급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조하지 않고 자본가들의 생산수단 및 생산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게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 같은 것은 필요하지가 않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건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고 수권정당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면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기본 방도”로 삼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노동계급의 독립성도 강조될 이유가 없다. “양심적 자

본가, 애국적 종교인 등 광범한 계급 계층들이 모두 ‘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정부, 공동정부, 단독정부 등 다양한 방식의 집권형태가 존재할 수 있”고, 이런 계급연합을 통해 수립될 “자주적 민주정부”는 특정 계급의 배타적 정권이 아니다. 그것은 진보적 민주주의에 동의하는 여러 계급 계층의 연대연합에 기초한 정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등 남미에서 발전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한다.

종속성과 비정상성?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과 전략은 명백히 잘못된 근거와 가정에 바탕하고 있다. 먼저 한국 사회가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라는 주장부터가 그렇다.

자주파는 놀랍게도 1980년대 중반 이래 지금껏 “식민지”, “종속성”, “비정상” 등의 분석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은 1980년대 중반 당시에도 맞지 않았지만, 세계에서 다섯째로 이 지스 구축함을 자체 제작·보유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 현실과는 더더욱 동떨어진 얘기다.

한국 자본주의는 후진국이나 제3세계가 아니다. 한국 자본주의가 비록 미국 자본주의의 하위 동맹자로 성장해 왔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것이 한국이 미국에 “종속”돼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국가가 강력히 개입해 자본 축적의 독자적 기반을 구축했고, 지배계급은 단지 미국의 ‘종속국’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의 이해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물론 이 발전 과정은 모순으로 가득 찬 것이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족적·민주적 문제들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자본주의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됐고, 한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도 미국이 아니라 유럽연합이다.

또, 한국 국가는 이미 10여 개 이상의 나라에 한국군을 파병해 놓고 있다. 이것은 단지 미국 제국주의의 압력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한 능동적 전략이기도 하다. 그런데 자주파 지도부는 이런 현실에 눈감고, 여전히 한국 자본주의 발전이 뭔가 종속적이고, 비정상적이어서 ‘사회주의적 변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반제국주의적 과제를 폐기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자주파는 제국주의를 서방 열강의 제3세계 착취·억압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하고 미국과 한반도의 관계에만 거의 배타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곧잘 이런 오해를 한다. 이 때문에 자주파의 반제국주의는 민족주의적이고 협소하다.

그러나 레닌과 부하린이 선구적으로 분석했듯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가리킨다. 개별 기업들 간의 경제적 경쟁

이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군사적 경쟁을 수반하게 된 자본주의의 최고 발전 단계로 제국주의를 이해할 때 진정으로 국제주의적이고 일관된 반제국주의 관점을 취할 수 있다.

한국 자본주의 발전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발전을 환영하거나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발전을 인정한다는 것은 변혁의 성격과 전략에 중요한 함의가 있다. 자본주의는 생산력을 끌어올려 계급 폐지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며, 그것을 가능케 할 사회 세력인 노동계급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자본주의가 발전했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노동계급이 형성됐고, 계급 분단이 근본적인 사회적 분할선이 됐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계급은 놀라운 속도와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것은 한국의 노동계급은 사회주의적 변혁과 노동자 권력 수립을 뒤로 미뤄야 할 만큼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민족 모순 때문에 자본주의 발전이 가로막혀 사회주의 혁명의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고 노동계급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자주파의 분석은 틀렸다.

노동계급 투쟁이나 계급연합이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의 문제점은 잘못된 분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분석에서 나오는 전략이 진정한 문제다. 자주파

는 한국 자본주의의 “종속성”에 대한 분석에서 “민주주의 체제”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 우선적 과제라는 결론을 끌어내면서, 이 과제 수행을 위한 범계급적 단결을 주장한다.

이 때문에 반자본주의적인 투쟁과 노동계급의 자주적 행동은 부차적이 된다. 특히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기본 방도”로 삼기 때문에, 아무리 “선거 투쟁과 대중 투쟁의 유기적 결합”을 말하지만 대중 투쟁 건설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기 쉽다. 대중투쟁은 선거에서 득표를 위한 보조 수단에 머무르게 되고 득표에 도움이 안 되면 언제든지 중단해야 하는 것이 된다.

무엇보다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의 핵심 문제점은 그것이 “진보적 민주주의에 동의하는 여러 계급 계층의 연대연합”을 중시한다는 데 있다. “양심적 자본가, 애국적 종교인 등 광범한 계급 계층들을 전부 망라한” 단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이것은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민주당까지 포함한 반이명박 민주대연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단결하면 좋은 거 아니냐’는 소박한 심정에서 이를 지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계급연합 전략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계급을 뛰어넘는 동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주로 자본가 계급 기반에서 돈·인력·자원을 충원하는 명백히 자본가 계급의 정당이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는 자본가 계급 정당의 일부와도 손을 잡는 게 우리 편의

힘을 키우는 길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인민전선 이론가들은 산수의 가장 기초인 덧셈을 넘어서지 못한다. ‘공산당+사회당+아나키스트+자유주의자 = 그 각각을 단순히 합한 것’이라는 등식이 그들 지혜의 전부이다. 그러나 … 합성되는 힘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한다면 합력은 줄어든다. 정치적 동맹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합력은 제로가 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정치 연합은 그 기본 이해관계가 1백80도 반대인 두 계급 사이의 동맹인지라 프롤레타리아의 혁명 세력을 마비시키는 데에만 이바지할 뿐이다.”

계급연합에 얽매이느라 노동계급의 투쟁이 마비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1930년대 프랑스 인민전선 정부 등장 이후 노동자 파업 물결이 거세지자 급진당(중간 계급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 정당)은 갈수록 겁을 먹었다. 그러자 공산당은 급진당을 인민전선에 묶어두기 위해 노동계급에게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계급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 투쟁을 억누른 것이다.

노동자 투쟁이 억제당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파가 여세를 몰아 반동 공세에 나선다 해도 대처하기 어려워진다. 이것이 1973년 칠레에서 벌어진 일이다.

아옌데가 이끄는 칠레 국민연합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고 이에

우익이 저항하자, 노동계급의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벌어졌다. 그러나 국민연합 정부는 노동자들이 너무 멀리 나가면 자본가 계급과 동맹이 깨질 수 있다며 그것을 뜯어말렸다. 이런 상황에서 피노체트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노동자 조직들을 파괴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실제로 이 나라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과 전략에 따라 소위 ‘자주적 민주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곧바로 국내의 지배계급의 강력한 개혁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후퇴 없이 진보를 추구하려면 노동계급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본가들의 건장한 생산 활동, 자유로운 자본 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한다”는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으로는 노동계급의 투쟁을 고무하기 힘들다.

심지어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될 경우 경제적 혼란이 극대화”될 수 있다면서, 개혁의 속도 조절을 말하고 있다. 나아가 “각 나라와 민족들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펼쳐지는 무한경쟁체제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경쟁력”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 이런 강령으로는 노동계급의 투쟁을 고무하기보다는 발목을 잡기 쉽다.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모범으로 제시하는 베네수엘라 차베

스 정부도 자본주의 내에서 이뤄지는 개혁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차베스 정부는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운동의 상징이 돼 있고 실질적인 개혁과 진보를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는 동시에 선거를 통해 집권한 진보 정부의 모순도 보여 주고 있다. 차베스 정부가 우파의 반동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동력은 아래로부터 베네수엘라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있었다.

그러나 차베스가 수장으로 있는 국가 기구는 자본주의의 이해 관계를 위해 고안된 것이고, 잘해야 건성으로 개혁을 수행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개혁을 사보타주한다. 그래서 국가 관료들의 사보타주와 여전히 주요 산업과 언론들을 장악하고 있는 친미적 자본가 계급의 반동 시도 때문에 차베스의 개혁은 계속 걸림돌에 직면하고 있다.

결국 진정한 진보와 개혁을 이루려면 자본주의 국가 기구에 도전하는 근본적 변혁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떼려야 뗄 수 없게 결합된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사회주의 변혁은 시기상조이고 먼저 ‘진보적 민주주의’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급이 자본가 계급과 권력을 공유하고 자본가들의 사회경제적 권력을 보장하면서 사회·경제적 모순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상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해 지배계급은 분명한 위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노동계급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은 이런 과제 수행을 방해할 뿐이다.

진보대통합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

6월 1일 새벽,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서 주요 참가 단체들이 최종 합의문에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동당의 당권파와 진보신당의 독자파는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을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있다. “진보 양당의 통합 반대파들이 의도와 무관하게 적대적 상호의존 관계가 된 셈이다.”(레디앙)

그러나 자본가 정치가 지배하는 한국 공식 정치에서 진보정치가 의미 있는 세력이 되려면 진보정치세력이 단결해야 한다. 게다가 진보정당의 분열이 노동자·민중의 단결과 투쟁에도 적잖은 난관을 조성하곤 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많은 진보 염원 대중이 진보정치세력의 단결을 원했다. 그래서 우리도 진작부터

진보대통합을 지지해 왔다.

이번 합의문은 아쉬움과 우려가 있지만, 진보의 가치를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세계 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자본주의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며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 존중·노동 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공감할 만하다.

노동자·민중이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치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진보적 대중정당”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부속 합의문으로 채택한 ‘20대 주요 정책과제’도 진보세력의 공동 요구로 삼을 만하다. 비정규직 해소, 무상의료, 무상교육, 투기자본 규제, 핵발전 폐기, 국가보안법 철폐, 해외 파병 반대, FTA 반대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아쉬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치세력의 단결을 향해 일보를 내딛은 이번 합의를 지지한다.

진보대통합을 둘러싼 쟁점들

하지만 이번 합의문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완주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가치 중심의 정책연대와 호혜 존중

을 기준으로 선거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며 자본가 야당인 민주당과의 연합(민주대연합) 가능성을 열어 놔다.

“2012년 대선 선거연대”라는 뒷문을 열어 놓음으로써 “진보정치 세력의 승리를 위해 완주”한다는 “기본 원칙”을 공문구로 만들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진보 후보의 완주가 예외적이고 실천에서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가 “기본 원칙”이다 시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 없는 기우가 아니다.

우리는 진보 후보의 독자 출마를 원칙으로 하되, 진보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선거구에서는 일부 민주당 소속 개혁 후보에게 비판적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범야권연대’는 이런 투표 전술이 아니라 민주당과 체계적 협력을 맺는 것을 뜻한다. 진보정치세력의 연합이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같은 자본가 정당이 아닌 진보정치 대안을 효과적으로 건설하는 데 복무하기보다는 민주대연합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과의 동맹이 선거 영역만이 아니라 투쟁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곤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노동자 정당과 자본가 정당과의 체계적 협력(적대 계급과의 동맹)을 뜻하는 민주대연합은 노동자 투쟁에 해악적이다. 민주당이 선거를 위해 현안 쟁점에 대해 ‘진보적’ 미사여구를 남발할 수는 있어도 노동자 투쟁에 대해서는 자본가의 본능적 적대감

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강령에도 있고, 애초 연석회의 합의문 초안에도 있었던 “자본주의 극복”이 “자본주의의 폐해와 한계 극복”으로 완화된 것도 이런 민주대연합 전략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보대통합 당의 지향점을 톤 다운 한 것은 2008년 이래 계속되는 세계경제 위기와 아랍 세계의 혁명 등으로 반자본주의 사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 걸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대통합을 지지하지만, 그 진보대통합이 민주대연합을 향해 나아가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같은 맥락에서 통합 진보정당에 국민참여당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당권파(경기동부연합)는 진보대통합을 친자본가적인 자유주의 정당 국민참여당을 포함시킬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이정희 대표는 6월 7일 국회 연설에서 국민참여당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의사를 피력했다.

바로 그날 국민참여당 대표 유시민은 진보정당들이 “집권전략”으로 나아갈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참여당이 함께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정당들에게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활동”을 그만하라는 ‘충고’까지 했다.

국민참여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친자본가적 자유주의 정당이다. 따라서 진보대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게다가 그들은 한미 FTA 추진, 이라크 파병, 비정규직 양산 등 집권 시절 과오를 제대로 반성한 적이 없다.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유력 대선주자가 있는 참여당과 합당해서 몸집을 키운 다음, 민주당과 장관 자리들을 거래하며 연립정부를 구성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구상에서 진보신당과의 통합이 걸림돌이 된다고 계산하는 듯하다.

이런 식으로 진보의 원칙과 단결을 파괴하면서 친자본가적 자유주의 정당과의 동맹을 추구하는 것은 선거에서 득표나 권력 나눠먹기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갉아 먹고, 노동자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아 결국 진정한 진보와 개혁을 방해할 것이다.

둘째, 이번 합의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하나가 이른바 ‘북한’ 문제였다. 최종 합의문은 첨예한 견해 차이를 절충했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6·15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

이 합의문에 대해 진보신당 ‘독자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반발 중에 일부 내용은 우파적 동기에서 비롯한 듯해 우려스럽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탄압, 권력 승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죄다 ‘반북주의’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제국주의 입장에서 미국 제국주의와 남한 지배자들의 대북 압박을 단호하게 반대하지만, 북한 체제가 남한 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즉, 북한은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의 북한 비판은 우파의 ‘반북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 일부 진보 인사들처럼 지배계급에게 ‘합리적 진보’로 인정받기 위한 종류의 북한 비판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 변혁의 대안을 옹호하기 위해 우리의 지향 체제가 북한의 그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권력을 세습하는 북한이 사회주의라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본주의에 반감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에 환멸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셋째, 당 운영 문제다.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은 동지적 신뢰다. 몇 가지 제도들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현재 진보대통합은 한때 분열했던 사람들 사이에서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진보대통합의 구성요소들은 정치적으로 이질적이다. 그래서 합당은 원칙, 강령, 전략 등을 둘러싼 구성요소들 간의 정치적 이질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진보대통합 당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얼마간의 정치적 수렴이 이뤄졌다는 뜻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 수렴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이미 나름의 원칙과 강령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쉽게 양보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북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듯이).

정치적 수렴이 단지 부분적이기 때문에 상이한 경향들이 숨쉬고 공존할 조직 구조, 즉 공동전선적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공동전선적 모델은 정치적·조직적으로 느슨하고 그 구성요소들의 정치적·조직적 독자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진보대통합의 조직 모델은 당 모델(신설 합당)이다. 그것이 더 단단하고 높은 수준의 단결을 보장해 준다는 믿음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지난 민주노동당의 경험에서 봤듯이, 당 건설이 자동으로 불신과 이견을 해소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당 모델을 채택했을지라도 그 운영은 공동전선적으로 하는 것이 단결에 더 이롭다.